생명공학계 "생명윤리법안 반대"

체세포 복제에 이종 핵이식 허용 요구 … 배아연구 제한 완화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안에 대해 국내 생명공학자들이 대부분 반대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생명공학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9월23일 발표한 생명윤리법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 △체세포 복제 금지 △이종간 핵이식 금지 △배아연구 원시선 생성 이전으로 제한 등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우선 체세포복제가 금지되면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자가치료용 복제배아 생산이 어려워져 줄기세포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세포치료기술 개발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명공학자들은 또 인간 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치료용 복제배아 생산 이전단계의 예비실험과 기술력 축적을 위해 이종간 핵이식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생명공학자들은 원시선 생성 이전(수정이후 약 14일 이내) 배아 연구만 허용되면 수정 후 4-9주에 유산된 태아의 미분화 생식선을 이용한 줄기세포(EG세포)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EG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주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 서울대 교수)은 전체적인 연구개발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최근 EG셀을 통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제대로 된 생명윤리법을 만들려면 우선 인간복제 금지 부분만 법제화하고 나머지는 선진국들의 동향을 지켜보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4>